

[새 정부 업무보고]
“국민권의 구제를 통한 민생안정,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 민생 고충 최우선 해결,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 -

(2022. 8. 23., 국민권익위)

서민피해가 우려되는 주거·복지·금융민원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집중 해결하고, 소외지역·취약계층의 생활고와 영세·중소기업이 겪는 경영상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청취하고 해소한다.

대규모 집단민원이나 기관·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로 장기간 표류하는 갈등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인-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민원 조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 채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원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지침을 마련한다.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상향하고, 신고자를 알려달라고 요구 또는 지시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생 고충을 최우선 해결하고 국가청렴도 20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23일 서면으로 보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주거·복지·금융 관련 민원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집중 해결하고, 대통령실 접수 서신민원 중 취약계층 생활고 등 시급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조사해 처리하는 한편, 최근 3년간 20.0%였던 고충민원 인용률을 올해 21.3%까지 높인다.

대규모 집단민원이나 기관·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갈등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또 민원 접수 초기에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민원인-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민원 조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른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행정심판법」 개정안 마련을 검토한다.

행정심판위원의 신분을 법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하는 한편, 행정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구성을 회계, 건설, 의약품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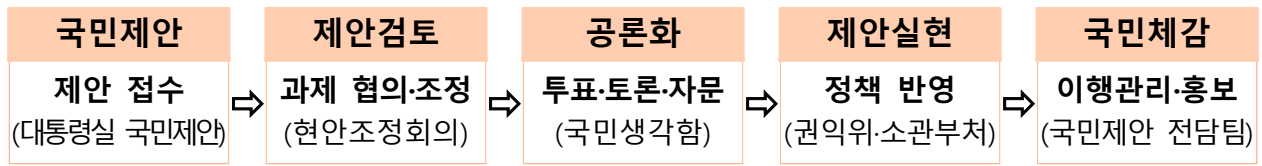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심판 접수부터 심리까지의 과정을 가상공간에서 체험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관, 체험관, 교육관, 이벤트관으로 구성된 ‘메타버스 체험관’을 본격 운영한다. 2024년까지는 체험관에서도 온라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심판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도입해 청구서 자동완성 기능, 청구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심판 사례도 제공한다.

대통령실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생각함에서 추가적인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발굴·개선을 지원한다.

또 ‘국민제안 전담팀’을 운영해 국민제안에서 발굴한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이행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변화를 만든다.

[국민제안 정책반영 과정]



연 2천만 건의 민원이 처리되는 디지털 플랫폼 ‘국민신문고’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고 디지털 원패스 기능을 도입해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또 현재 1,100여 개의 연결기관을 사립대학교, 공공기관 등을 포함해 2,000여 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국민의 관심이 큰 현안에 대한 민원 빅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며, 2024년까지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선제대응 및 피해방지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공공기관의 공정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원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의 공정채용 표준지침을 마련한다.

오는 10월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이 있었던 1,21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의 방만한 관사 운영, 공직자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현행 국가자격시험 제도 등 공직사회의 불공정한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한다.

올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반기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공직자 대상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행위규범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총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의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통합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 인식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 반부패 노력 성과를 평가한다.

* 중앙행정기관 46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공공기관 199개 등(2022년 기준)

모든 공직자가 연간 2시간씩 의무 이수해야 하는 청렴교육의 기관별 실적을 점검하고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등을 실시한다.

공기업 등의 경영활동과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을 개발·보급해 기관의 자율 실천을 지원한다.

2023년 상반기까지 ‘공공재정환수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각각 규정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 법률로 통합해 혼란을 예방한다.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신고자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보상금 지급요건 등

비실명으로 변호사를 통해 부패·공익신고를 할 때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신고에서 조사·수사·재판 등으로 확대한다.

현행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률(4%~30%)을 정률제(30%)로 통일하고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조정·폐지한다.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보도한 자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알려달라고 요구·지시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보호조치 이행 의무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공표한다.

작년 기준 총 402조원에 달하는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신고 및 처리현황 등을 ‘청렴포털’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별·예산사업별 부정수급 비율과 환수금액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각 기관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 공공재정 부정청구 취약·빈발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308개 기관에 대한 환수·제재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환수하도록 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민생 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에서 한국 반부패 정책 국민참여 우수사례 알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소개,
청년층 대상 반부패 교육 사례 공유 -

(2022. 7. 5., 국민권익위)

지난 7월 5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2022년 제2차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Anti-Corruption Working Group, ACWG)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국민 참여 사례와 청년층 대상 반부패 교육 사례를 국제 사회에 알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7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2차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에 참석해 ‘반부패 정책과 국민 참여’를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청렴연수원의 청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했다.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이하 회의)는 반부패 관련 국제공조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회의다.

올해 회의에는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호주를 비롯해 회원국 정부 대표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등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개최된 1차 회의 이후 두 번째로, 회원국의 반부패 정책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2022년 이행보고서와 사례집 작성, 반부패 원칙 수립 등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주최 측 요청으로 첫날 워크숍에서 ‘반부패 정책

과 국민 참여’를 주제로 국민 참여 거버넌스 구성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소개했다.

또 청년층의 반부패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이 실시하고 있는 청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국민 참여 특히 청년층의 반부패 인식 제고는 효율적인 부패 예방과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반부패 국민 참여와 교육 사례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APEC 반부패투명성 회의에서 한국 반부패 정책 성과 공유

- 부패행위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 강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 등 발표 -

(2022. 8. 17., 국민권익위)

8월 17일부터 이틀간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산하 제35차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Experts Working Group) 총회에 참석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내용 등을 발표했다.

경제주체의 주요 반부패 동향을 공유하고 반부패 국제연대를 위한 논의의 장인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에는 21개 APEC 회원국 반부패 기관 실무자,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 반부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매년 2월과 8월에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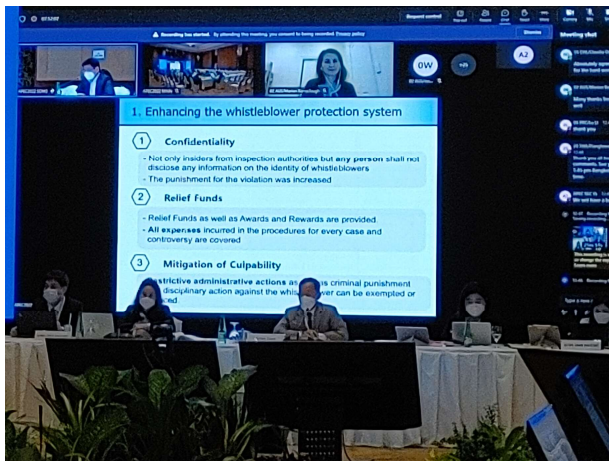
이날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의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UN 반부패협약의 주요 이행성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를 강화한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올해 처음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내용 등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청렴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안내서’ 제작 등 최근 한국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 추진성과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UN반부패협약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 외에도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의 올해 업무현황 보고, 2023-2026 전략계획 수립, 부패척결에 있어 미디어의 역할 강화, 미국의 내년도 총회 개최계획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국제사회에서 반부패는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국제규범과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아시아태평양 구역 내 경제협력과 반부패 공조를 위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반부패 노력을 적극 알리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UNDP), 한국의 청렴포털 개도국 공유 위해 협력하기로

- 청렴포털 내용 및 성과 등 공유하는 온라인 설명회 개최, 향후
협력대상국 선정해 기술지원 등 예정 -

(2022. 7. 1.,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29일 한국의 디지털 기반 부패·공익신고시스템인 청렴포털의 내용과 성과·경험을 공유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세네갈,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 * 청렴포털(Clean Portal) :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이번 설명회는 국민권익위와 UNDP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개발협력사업인 ‘한국의 디지털 기술 기반 반부패 시스템 공유 사업’의 첫 단계이다.

UNDP는 향후 반부패 정책 추진에 있어 디지털 전환(digitalization)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디지털 전략계획을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와 이번 협력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한국의 디지털 기반 부패·공익신고시스템인 청렴포털을 개발하고 운영해 온 노하우와 경험을 설명했다.

이후 UNDP 서울정책센터는 청렴포털 공유 협력사업과 UNDP 디지털 전략계획과의 연계성 및 협력(파트너) 대상국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국민권익위와 UNDP는 청렴포털 전수사업을 희망하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사업대상 적합성을 검토한 후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세부 분석을 거쳐 기술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청렴포털은 부패·공익신고부터 보호·보상까지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부패시스템으로 이를 구축하는 국가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UNDP와 협력해 개발도상국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위해 청렴윤리경영 시범운영 공공기관 14곳 선정

- 청렴윤리경영 교육 실시, 부패 취약분야 기관별
컨설팅 통해 개선 방향 제시 -

(2022. 8. 8.,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윤리경영 시범 운영 기관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기관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청렴윤리경영 시범운영 기관(14곳) >

구분		기관명
공기업	시장형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준시장형	한국철도공사, 한전케이피에스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국민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집행형	도로교통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방공사·공단		서울시설공단, 인천교통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6개 공기업*을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 14개 기관을 추가 선정했다.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선정 심사에는 한국투명성기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이번 시범운영은 가이드라인을 각 기관에 실제 적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선정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패 취약분야 등에 대한 기관별 컨설팅을 통해 청렴 수준 진단과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시범운영 기관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채용비리, 회계 부정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국민과 공직자 24만 명에게 공공기관 청렴수준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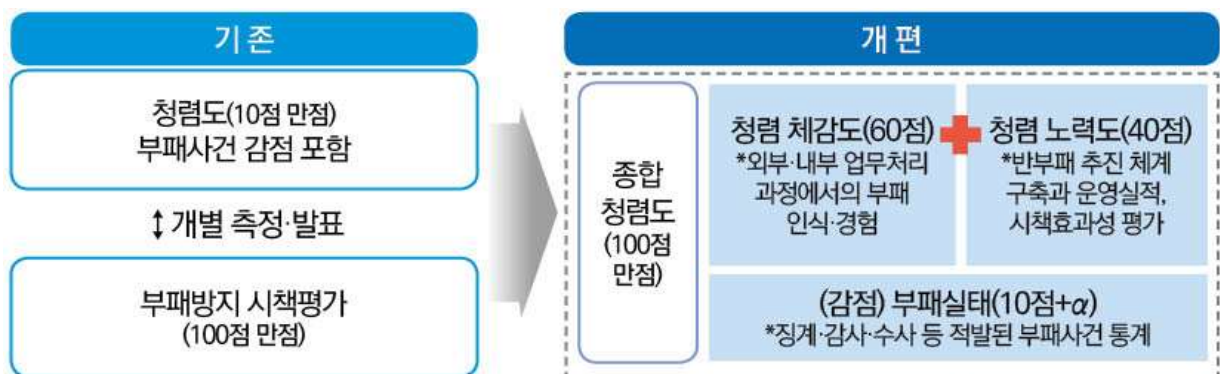
- 8월부터 573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설문조사 실시 -

(2022. 8. 11., 국민권익위)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약 24만 명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설문조사를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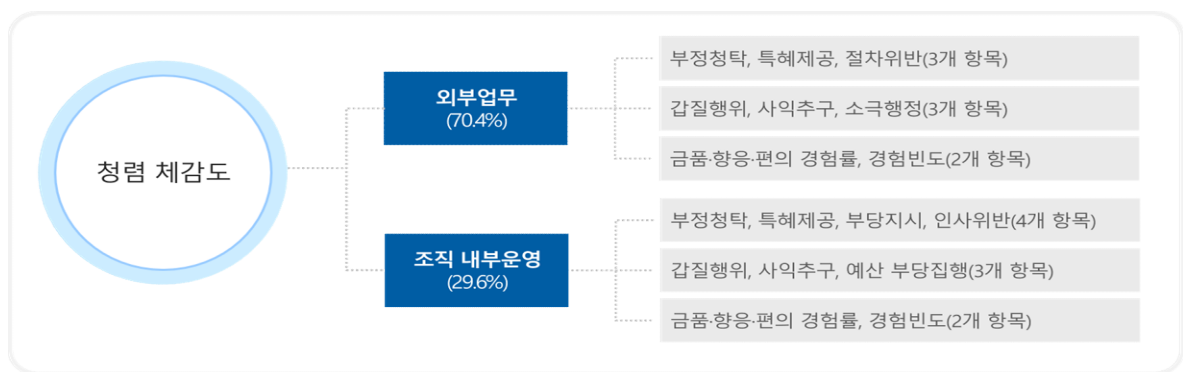
청렴도 측정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는 ▲ 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직원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60%) ▲ 각 급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40%) ▲ 부패공직자 징계 등 부패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10%+ α)로 구성된다.



8월부터 실시하는 청렴체감도 평가는 크게 외부업무와 조직 내부운영으로 나눠 설문조사 방식으로 측정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사익추구 등 꼭 필요한 항목은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설문은 통합·제외하는 등 측정항목을 대폭 개편했다.

<외부업무>에 대해서는 실제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에게 부정청탁, 사익추구, 소극행정, 금품·향응·편의 경험 여부 등 총 8개 항목을 묻는다.

<조직 내부운영>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사, 예산, 일반 행정업무 등 조직 내부운영 과정에서 특혜제공, 부당지시, 인사위반, 예산 부당집행 여부 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묻는다. 내부운영은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청렴체감도 측정은 전화 또는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조사 방식으로 11월까지 이루어진다.

한편 청렴노력도 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추진실적을 11월에 제출받아 내년 1월까지 실시하며, 부패실태 평가까지 종합 합산한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 23년 1월 중 1~5등급으로 발표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참여자의 응답으로 공공기관의 부패 수준을 진단해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공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국민권익위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5일부터 본격 시행

- 변호사를 통한 부패행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신설
- 신고자 책임감면 및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공공기관 안내 의무화

(2022. 7. 5., 국민권익위)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를 할 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 7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법 개정 전에는 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대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했다.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해고·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 비용에 대해서만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명예훼손,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

* 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쟁송비용, 이사·치료비용, 임금손실 등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

또한, 비위면직자 소속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는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비위면직자 재취업 제한제도란 재직 중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또는 퇴직 후에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사람이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재직 당시의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책임감면, 구조금 등 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몰도바·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몽골에 한국의 반부패 정책 알린다

- 동유럽, 중앙아시아 국가 반부패 교육수요 대응 위해 러시아어로
반부패 연수 과정 운영 -

(2022. 7. 12.,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청렴도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법령 및 제도를 몰도바, 몽골 등 4개국 반부패 관계기관에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동유럽,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비대면으로 운영했다.

이번 연수에는 몰도바 국가반부패센터, 몽골 부패방지청,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 타지키스탄 국가금융통제부패방지청 등 4개국 반부패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총 40명이 참여했다.

러시아어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는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제도로 구성되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국내 반부패 법령과 함께 유엔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국제 반부패 협약의 주요 내용도 함께 소개된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가 공직자와 일반국민을 위해 제작한 다양한 청렴교육 콘텐츠를 러시아어 자막과 함께 제공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다.

러시아어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과정은 동유럽, 중앙아시아 지역의 반부패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영어 과정과 별도로 2020년에 신설됐다.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연수과정에 현재까지 참여한 국가는 67개국에 달하며, 그간 청렴도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의 도입, 법령 제·개정 등 총 61건이 현업에 적용되는 등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연수과정은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제도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은 유엔반부패협약에 규정된 의무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가청렴도(CPI)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의 반부패 정책 전수에 대한 각국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